

국내 통신사업 육성정책 방향

이 규 태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

1. 머릿말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18세기 후반에 인류가 겪었던 산업사회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광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정보화사회의 기반구조인 통신망의 광대역화와 초고속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제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기술은 국력의 척도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선진국들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고속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과 정보통신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지기반과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촉진,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중소기업의 육성,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촉진과 산업육성 등 전반적인 정보통신분야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국내 통신사업의 육성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내 통신사업 육성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2.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통신사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WTO협상을 통한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 경쟁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 통신시장의 단일 시장화 추세 외에도 한 국가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이 곧 그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각국은 통신산업의 비교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관련제도 개편에의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경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한경쟁 및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유수의 통신사업자들간에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94년 5월부터 2년시한으로 협상이 진행중인 WTO기본통신협상은 전화, 이동전화 등의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으로서 금년중에 타결될 전망이며, 이 결과로 1998년 이후부터는 국내 통신시장이 전면적인 국제경쟁 체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1994년 1월부터 완전개방된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는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 통신서비스 분야는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기업의 체질 강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정보통신부는 선 국내경쟁 후국제경쟁의 원칙하에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의 결실이 이용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윤택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3. 국내 통신사업 현황

한국의 정보통신사업은 1982년 한국통신이 정부의 직접 경영으로부터 분리되고, 한국 데이터통신이 설립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를 거치면서 전화보급률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한국통신이 주요 기간통신을 독점으로 운용함으로써 적지않은 비효율성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증대되면서, 단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통신사업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 기본 통신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5년말 현재 전화시설은 21,684천회선으로 세계 9위이고 100인당 가입전화보급률은 41명, 이동전화가입자는 2백만명, 무선호출가입자는 천만명을 넘어섰으며 교환기 전자화율은 100%를 나타내고 있고, 부가통신시장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제조업 부문의 CALS도입, 멀티미디어 통신의 기술발전으로 DB사업, PC통신, 전자우편, EDI, 컴퓨터예약 등을 포함하는 VAN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4%정도 성장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총 11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2005년에는 총 35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무별로는 무선통신, 부가통신, 멀티미디어 사업 등이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전화, 전용회선 시장 등은 꾸준히 성장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신시장 구조는 경쟁이 도입된 부분에도 독점체제와 요금규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실질적인 경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독점하에서의 두 사업자에 의한 시장분할”에 가까워, 대외개방시 경쟁력의 열위가 우려되며, 세계의 통신시장에 진출하여 선진국의 국제적 대기업과 경쟁,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서 다소 열등한 상태이다.

4.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시책

정보통신부에서는 1995년 1월 통신사업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과거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 통신사업자로 되어 있던 사업자 구분방식을 기간 통신사업자로 일원화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유·무선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신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통신설비제조업체도 일반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도 전환하여 전신·전화,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받는 역무,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역무를 제외한 여타 역무는 정부의 허가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7년 7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

향”을 발표하여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하에 전면적인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1995년 12월15일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여 금년 상반기중 PCS, TRS, CT 2, 국제전화, 무선데이터 통신, 무선폭출, 회선 설비임대역무 등 7개분야의 30여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번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 추진의 의의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지인 동시에 경쟁을 통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통신사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제조업 및 관련 S/W산업의 육성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훈련기회 확대와 대량배출을 촉진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을 추구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의 통신 선진국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지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중 전기통신관련 법령을 개정, 신규 통신사업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내 통신사업이 조기에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 신청에 있어서 정부의 사전공고 방식을 폐지하고, 기존 서비스는 정기신청에 의하여 신규서비스는 수시신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허가대상사업은 모든 기간통신사업으로 하되 시내전화는 실질적

인 경쟁 가능성과 보편적서비스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시기를 결정하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배정된 주파수를 일정기간 미사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통신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통신관련법을 재개정하고 1998년이후 부터는 기술발전예 따른 신규서비스의 개념과 통신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일련의 법·제도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정보화가 급진전 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통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통신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통신이 국내적으로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며 국내 통신사업자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한국통신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금년 3월의 조직개편에 이어 인사제도, 사업구조, 기업문화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 통신사업의 경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재 사전적 규제 위주의 정책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술과 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제약없이 정보통신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정보통신 발전에 활용토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간 동등한 상호접속 보장과 회계를 분리시켜 내부보조를 방지하고 1995년부터 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비지배적 사업자는 신고로 이를 대체하게 한 것을 신규로 허가되는 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다.

5. 맺음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통신서비스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 우리의 통신장비나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 등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관련 각종 법규의 정비와 주파수, 번호 등 국가의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